

‘성고문사건, 보도 이렇게 통제했다

진실은 폐과정에 참여한 제도언론 기자들

현정권으로부터 손지를 받기도

현 정권은 80년 11월 언론통제합조치를 취한데 이어 12월말 언론기본법이란 강력한 제도장치를 마련, 언론의 조종과 대중조작을 정권유지의 지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문공부 내에 홍보조정실을 신설하고 언론통제의 구체적 작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작업이란 하루도 빠짐없이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보도통제지침서'라는 것을 시달하여, 사건의 보도여부는 물론, 보도방향과 보도의 내용·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지시하는 일이다.

이러한 언론통제를 통해 현 정권은 현상의 핵심과 본질을 은폐·왜곡하고 지역말단을 과장·부각시켜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며, 제도언론은 현 정권과 손을 잡고 홍보임무를 떠맡음으로써 억압적 통치기능의 일부를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은 언론통제를 위한 메시지 '보도지침'이라는 것이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즈음하여 어떤 내용으로 각 언론기관들에 시달되었는지를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발간한 『말』 특집호, '정치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통하여 알아보자. 다음은 성고문사건에 대한 보도지침이다.

7.9. 부천서 형사의 여피의자 폭행(추행)사건은 당국에서 조사 중이고 곧 발표할 예정. '성폭행사건'으로 표현하면 마치 기정 사실화한 인상을 주므로 '폭행주장관련'으로 표현 바꾸도록.

7.10. 부천서의 성폭행사건 ① 현재 운동권 측의 사주로 피해 여성이 계속 허위 진술. ② 검찰서 엄중조사 중이므로 내주 초 사건 전모를 발표할 때 까지 보도를 자제해 줄 것. ③ 기사제목에서 '성폭행사건'이란 표현 대신 '부천사건'이라고 표현하기 바람.

7.12. 부천서 성폭행사건, 검찰 발표 때 까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일체 보도하지 말 것. 부천사건의 검찰발표시기에 관한 것이나 부천사건 항의 시위, 김대중의 부천사건 언급 등 이와 관련된 일체를 보도하지 말 것.

7.15. 성고문사건은 계속 보도를 자제할 것. 오늘 N. C. C. 등 6 개단체에서 엄정수사와 관련자처벌을 촉구했는데 이 사실은 보도하지 말 것.

7.16. 검찰발표 때 까지 계속 보도를 자제할 것.

7.17. ① 오늘 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②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 (크기는 재량에 맡김) ③ 검찰발표 전문은 꼭 실어줄 것. ④ 자료 중 「사건의 성격」(즉, 혁명을 위해 성(性)을 도구화)에서 제목을 뽑아줄 것. ⑤ 이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고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할 것. ⑥ 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 보도 내용은 보도하지 말 것. ⑦ 시중에 나오는 반체제측의 고소장 내용이나 NCC, 여성단체 등의 사건관계 성명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7.19. 18일 오전 8시부터 기독교회관에서 NCC인권위, 여성위, 구속자 가족 등이 공동으로 부천사건 폭로대회를 가질 예정. 이 내용은 보도하지 말 것. 부천사건 변호인단 회견은 회견했다는 사실만 보도할 것.

7.20. 범야권의 부천 성폭행사건 규탄대회관계 (명동성당) ① 경찰저지로 무산된 사실은 2단 이하로 조그맣게 싣고 사진 쓰지 말 것. ② 이 사건과 관련해 김수환추기경이 피해당사자 권양에게 편지 보낸 사실과 신민당 대변인의 집회방해 비난성명은 간략하게 보도할 것. ③ 재야 5개단체의 재수사 촉구 성명은 보도하지 말 것. ※ 안전기획부측, 명동집회는 홍보조정지침대로 보도할 것을 요망. ④ KSCF의 부천사건규탄 회견은 보도하지 말 것.

7.29. 성공회주최의 부천사건규탄모임은 사회면에 조그맣게 1단기사로 보도할 것. 이민우 기자회견, 「김형배 전문위원이 지난번 명동 성고문규탄대회 때 양심선언했다」고 밝힌 내용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7.30. 미국무성, 「부천 성고문사건에 유감」이라는 논평은 보도하지 않도록. 부천성고문사건에 대한 각 단체의 항의 움직임을 보도하지 않도록. 민주협, 항의단 구성해 각 언론사 순방하면서 항의한 사실은 보도하지 말 것.

8.5. 4일 저녁 홍제동성당에서 정의구현사제단 주최로 성고문규탄집회. 이 사실은 보도하지 말 것.

보도지침에 등장한 성고문사건은 거의 광적인 통제대상이 되어 보도의 '자제'와 '일체불가'란 지침용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7월 22일~26일 닷새를 제외하고는 8월 5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되풀이 된다.

또한 성고문사건과 관련해 제도언론에 종사하는 자들이 현 정권과 야합해 진상을 은폐·왜곡하려는 과정에서 정권으로부터 거액의 손지를 받아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도언론의 사회부장이상 관련 간부들은 7월 16일 검찰발표를 전후해 문공부 고위관리의 인솔아래 간담회 명목으로 부산·도고온천 등에 놀러가 이 사건보도에 대한 협조의 댓가로 당국이 건네준 거액의 손지를 쥔다. 또한 법원출입 기자단들도 검찰발표 당일, 인천지점으로 출발하기 앞서 법원기자실에 들른 법무부 고위당국자로부터 각각 금일봉을 쟁겨냈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고문사건 폭로집회 '폭력정권타도'의 외침으로 발전하다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고문사건에 대한 폭로집회와 규탄시위가 잇따라 전개되는 가운데, '폭력정권을 타도하자'는 온 국민의 열망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7월 19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성고문 범국민 폭로대회'를 시발로, 성고문추방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고문규탄을 위한 기도회' (7.27. 성공회 대성당) '부천시 성고문진상 보고대회' (7.28. 광주) '성고문 인권탄압저지를 위한 미사' (7.30 부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8.4 서울)에 이어 8월 6일 충북 기독교청년협의회는 청주도시산업선교회관에서 120여명의 민주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폭력추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성고문 등의 인권 탄압사례보고가 있었으며, 기도회가 끝난 뒤 시내 중앙로로 진출하여 폭력추방을 위한 가두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성고문 고발장'을 배포하였다.

8월 8일에는 이리·익산 인권선교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주최하는 '성고문·용공조작·폭력정권 범도민 규탄대회'가 열렸다. 오후 4시 이리 창인동성당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이 지역 민주인사 및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1시부터 대회장 주변에 배치된 1,000여명의 경찰병력에 의하여 입구가 차단된 상태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오후 3시 옥외

방송을 시작하여 폭력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오후 10시까지 경찰과 대치하는 시위로 발전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대회간사 노병관 씨등 11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집단구타를 당했으며, 특히 백승환 전도사는 경찰의 집단구타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의 규탄대회에서는 시위를 지켜보던 성명미상의 학생이 시위진압과정에서 목부위를 유리로 찔려 생명이 위중한 상태이며, 길을 가던 천한영 (17세·이리고교 1년)군은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해 인근 KBS건물로 급히 피신하다가 계단에서 실족,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8월 9일에는 충북 고문폭력 및 용공조작 작지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가 오후 3시 청주제일교회에서 '성고문 및 폭력추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청주지역폭력사건 (청주교도소내 양심수 폭행사건, 7.23. 청주교회 경찰난입 및 폭력사건, 신신, 중원택시기사 부당해고사건 등)에 대한 경과보고도 있었다. 대회후 참석자들은 '성고문·폭력 자행하는 군부독재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8월 10일 부산지역에서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등 5개 민주단체들이 오후 7시 부산중부교회에서 '성고문폭로대회'를 거행하려 했으나 경찰

시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권양 재판에 즈음하여 취한 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부천시 성고문사건 폭로로 널리 알려진 권양의 공문서위조혐의의 공판일이 10월 13일로 잡혀졌다. 당국에서는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구름떼처럼 밀려올 권양의 증인들의 눈과 귀와 입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리 공판장 주변을 철통같이 봉쇄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대로라면 권양 사건은 하나의 단순한 공문서위조사건일 따름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사건을 이토록 무서워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사건이야말로 권양이 소망하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며, 진실을 향한 불같은 의지가 온 국민에게 확고하다는 사실을 당국이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고 이 사건의 재판을 실질적으로 공개함과 아울러 성고문 관련자들에 법조치하는 일뿐이다.

천인공도할 만행을 자행하고 국민 앞에 잘못을 사죄하기는커녕 그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현 정부의 민주·정의사회건설은 허위임이 만천하에 재증명되었다. 국민을 우롱하며 폭력으로 진실을 막으려는 현정권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당국이 성고문의 항의대열을 수천의 경찰력으로 저지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국회에서의 민주당과 장관들의 허위조작연극을 보고 들었으며, 철의 장막에서나 있음직한 보도통제지침서를 통해 현정권의 가증스런 언론통

제의 실상을 알았다. 더구나 연일 끊이지 않는 월거·연행·구속과 함께, 우리의 후세에까지 두고두고 값야 할 빛더미 잔치였던 아시안게임을 통해 현정권의 반민증성을 똑똑히 보았다.

지금까지의 당국의 처사로 미루어 보아 이번 권양의 공판과정에서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그들의 공권력남용과 진실은폐의 만행이 다시금 세상에 밝혀질 뿐이다.

아울러 말해 두고 싶은 것은 이번 성고문사건을 외면하거나 적당히 묻어둔 채 논의되는 어떤 개헌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금번 정기국회가 성고문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 양심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언론은 그것을 움직이는 언론인의 양심으로 국민의 공기관으로서 언론기관의 진실보도라는 사명을 기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국민은 힘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13일 공판에 대거 참석하여, 권양에게 용기를 주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또한 당국의 편에서 서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제도언론을 거부하고, TV시청거부와 시청료납부거부로써 편파·왜곡·조작 보도하는 언론의 시정을 촉구하는 일이며, 국세납부거부를 통해 공권력남용을 저지하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은 민주 시민의 권리이다.

진정으로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누릴 민주적인 제권리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쟁취될 뿐이다.

의 방대로 무산되었다. 이날 산발적인 시위와 연좌농성으로 38명이 연행되었는데, 이 사실을 안 청년·학생·시민들이 '연행자 즉각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 경찰측의 석방약속을 받고 해산하였으며, 연행자들은 새벽 2시경에 모두 석방되었다.

8월 11일 충남민주운동협의회, 대전NCC 인권위, 천주교대전교구 정의구현사제단 3개 단체는 오후 7시 대전 성남동성당에서 '성고문폭로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방대로 약 20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성고문 진상보고, 충남지역 인권탄압사례보고(목회자 불법연행, 민주화선언교사탄압, 5-6월 대중집회의 물리적 탄압사건)가 있었다. 성당에 들어가지 못한 1000여명은 대전터미널에 집결해 별도의 집회를 가진 후, 시위를 벌이다 3000여명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11일에는 광주지역에서도 오후 7시 30분경 남동성당에서 '성고문폭로를 위한 특별미사'가 있었다. 2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미사는 성고문사건관련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었던 김순자수녀가 경찰의 저지로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경과보고와 광주교도소내 폭행사건 및 이에 대한 소내투쟁 경과보고가 있었다.

8월 14일에는 34개 재야단체와 신민당이 주최하는 '고문·성고문·용

공조작 범국민 폭로대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신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회에는 옥내에 400여명, 대회장주변에 2,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폭력정권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시위로 발전했다. 이날 대회로 60여명이 연행되었다.

8월 21일에는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주최로 「여성해방과 성고문」을 주제로 '여성인권대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북부서는 박영숙위원장을 가택연금했는데 기독교청년 3명이 경찰의 저지를 뿌리치고 봉고차를 이용하여 박위원장을 모시고 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이 크레인차로 봉고차를 실은 채 이들을 연행하였다. 여성인권대회 참석자들은 저녁 8시경 대회를 마친 후, 기독교회관 현관에 연좌하여 성고문사건규탄과 연행자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밤 11시경 연행된 사람들이 풀려난 것을 확인한 후 해산했다.

9월 7일에는 해인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한 2000여 명의 승려들이 '국민을 위한 호국불교'를 천명, '불교약법철해' '사원의 관광유원지화 금지' '부천시 성고문사건해명' 등 10개항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8일에는 승가대생 150여명이 '성고문사건 해명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 18명이 연행되었다.

사법사상 최대규모 변호인단

8월 22일 인천지검은 부천시 성고문사건과 관련, 불구속 입건된 문귀동 전 경찰에 대해 고소 50일만에 기소유예결정을 내렸다. 이에 166명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문귀동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인천지검은 9월 5일 권양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 사건기록을 서울고검으로 송치하였으며, 9월 30일 서울고검도 재정신청을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기록을 서울고검으로 송치하였다.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결정 이후 166명이라는 우리 사법사상 최대규모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재정신청을 내고 공개된 재판의 절차를 요구하였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성고문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서' 전문에서 「제 1.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을 생략한 나머지 부분이다.

제 2.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

1. 위 각 범죄사실은 가. 피해자 권양의 검찰에서의 이에부합하는 진술 나.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다. 문귀동, 옥봉환 외 부천시 형사들의 검찰에서의 각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부분 (동인들의 진술 중 믿을 수 없는 부분 제외) 라. 검찰에서 시행한 현장검증결과와 기타 검찰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정황 및 마. 장차 현출될 기타 제반 증거 등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2. 검사의 불기소결정이유에 대한 판단

가. 문귀동의 일부 범죄사실 및 5명의 피의자들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무혐의결정의 이유는 전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변소와 부천시형사들의 진술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들 및 나머지 부천시형사들은 대부분 검찰수사 당초부터 공모하여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조작 등 허위진술을 일삼다가 수사과정에서 제반 객관적인 관계증거에 의해 파탄에 부딪치자 비로

소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하기에 이른 자들로서, 그 진술내용을 도저히 신빙할 수 없음이 재증법칙상 명백하므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결정이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나. 무혐의 결정이유 중

제 2 호 조사실의 현장상황을 설명한 대목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즉 조사실 바닥의 높이는 계단을 서너개 올라가야 할 정도의 높이이고, 외부와 면한 유리창은 조사실 바닥으로부터도 상당한 높이 위에 있었으며 문귀동과 피해자는 유리창 바로 아래쪽에 있었으므로, 실사 유리창에서 12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기고 앞을 순찰조가 돌고 있다고 해도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사광경을 목격·식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무혐의결정이유에서 마치 조사광경이 외부에서 들여다보일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면서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몸을 비틀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하는 등 소극적인 저항은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서 뒷수갑을 차고 각목을 양쪽다리 안쪽에 끼

운 채 꿰어앉혀져서 무수히 짓밟히고 구타를 당한 직후 아무도 없는 불꺼진 조사실 내로 끌려 들어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었던 정황을 고려하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고, 토요일 심야에 문귀동이 입회형사까지도 떼어내 버리고 23세의 처녀인 피해자를 데리고 단 둘이 불꺼진 조사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뒷수갑을 채운 채 1 시간 반 가량이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의한) 하는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인천사태수배자에 관한 정보를 캐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제반 관계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난 이상, 위 항거불능 사실이 위 추행이 가능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위 추행이 불가능하였음을 단정할 자료는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무혐의결정이유는 이 점에서도 부당하다.

나아가 무혐의결정이유 중 하나로 피해자가 조사 후에도 일체 항의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상식상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이 적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경찰관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 내에 구속된 상태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항의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상식상 납득할 수 없는' 꾀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검사가 스스로 인정한 문귀동의 일부 범죄사실 만으로 보더라도, 적어도문귀동을 구속 기소하기에는 충분하다. 즉 처녀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목적으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여 옷을 벗게 한 행위, 젖가슴부위를 3-4 회 가량 '쥐어박은' 행위, 고춧가루를 고문을 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 "내가 조사를 하면 간첩도 분다. 너같은 녀은 처음 분다"라는 등 폭언을 한 행위, 불꺼진 조사실 내에서 피해자의 양손에 뒷수갑을 채운 채 단독으로 조사하면서 젖가슴 부위를 '쥐어박은' 행위 등은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적 존엄성의 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거요, 우리사회의 인륜 도덕의 밑바탕을 뒤흔드는 만행으로서 적어도 국가공권력에 의거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며, 일반적

법감정으로 보나 형사정책적 견지에서나 마땅히 구속기소되어야 할 사안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우기 문귀동이 검찰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일삼았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적반하장 격으로 권양을 상대로 고소까지 제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문귀동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많다”고 하면서 기소유예결정을 한 것은 어불성설의 부당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사가 위 범죄사실을 두고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당시 문귀동이 피해자에게 진술의 의무가 전혀 없는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강요한 사실, 3 차례에 걸쳐 모두 비정상적인 시기에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되풀이하였던 사실, 특히 마지막 조사시에는 의도적으로 입회형사를 내보내고 밀폐된 조사실 내에서 뒤통수를 채운 채 1 시간 반이나 불을 끈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건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문귀동이 10년간 경찰관으로 봉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고 하는 것도 검찰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등 ‘불성실’한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고검이 재정신청을 기각하고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송치됨에 따라,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나서 신청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 및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 정권 아무리 생각해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이 글은 어느 주부가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공대위 편집실로 보내온 것입니다.

저는 40대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4일자 동아일보에서 권양의 재판이 13일에 있는데 방청이 제한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꼭 이 재판을 방청해야겠는데 어쩌면 좋을지, 어디다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서 편집실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권양을 꼭 보고 싶고 그 장하고 장한 권양을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외치며 그 끔찍한 일에 대해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성당에서 나오는 주보에 ‘보도지침’에 대한 글을 읽기 전 부터도 저는 귀먹고 눈먼 우리의 현실을, 이제 숨겨지도 답답한 우리의 사회를 미치듯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 정권은 아무리 생각해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정신보건법은 바로 현 정권에 적용시켜야 마땅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길거리의 꽃들, 요란한 장식, 쓸개까지 빼어주는듯 싶은 아시안게임의 모든것이 지겹고 싫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도시빈민들,

노동자들, 바로 이 순간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아시안게임반대 등을 외치다가 죽도록 매맞고 단식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의 아픔이 제 가슴을 찡니다.

이 모든 억압,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만드는 이 불의와 거짓과 참으로 거대한 악에 우리들 모두 함께 싸워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들 여성은 약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 속에는 이 겨레고유의 절김이 있지 않아요? 권양을 위해 성고문사건에 대해 싸우는 것이 무자비한 고문을 받듯 예사로 저지르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바로 우리나라의 참된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13일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큰 용기와 지혜와 희망으로 많은 일 하시기를 주님 축복 받습니다.

1986. 10. 4.

문 정자

(가명·서울 도봉구 쌍문동)

우리의 호소

우리들은 전 민주화운동단체와 국민들에게도 우리의 싸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할 때, 다음 희생자는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딸들·아내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

1. 성고문을 자행한 문귀동과 부천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서장 등 관련자를 전원 파면, 구속, **처단하라.**
1. 강제추행, 고문·폭력수사 책임지고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물러가라.
1. 성고문진상 은폐하는 검찰총장 물러가라.
1. 사건을 왜곡 조작한 소위 ‘공안분석’ 책임자 **처벌하라.**
1. 이번 사건을 무책임하게 편향 보도하는 언론은 **각성하라**
1. 법원은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라.**
1. 고문수단으로 강제추행 자행하는 파렴치한 군사독재정권 **물러가라.**

성고문 근절을 위한 민주시민의 실천사항

- 법원이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을 인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 무책임하게 편향, 왜곡보도하는 언론에 강력한 항의전화를 합니다.
-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하여 다치게 한 현장을 보도하지 않고, 전경이 다친것 만을 확대 보도한 방송국에 강력한 항의전화를 합니다. (MBC보도국 784-2000, KBS보도국 781-1000)
- 왜곡 편향보도하는 KBS의 시청료거부 운동을 더욱 더 널리 확산합니다.
- 이 전대미문의 끔찍한 사건이 철저히 규명되고 성고문을 추방하기 위해, 이웃과 함께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논해봅시다.
-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이 더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주장과 결의를 곳곳에서 천명합니다.
- 터무니없는 발표를 한 검찰총장에게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발표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 소식지를 받아본 시민은 이웃들과 함께 널리 돌려보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공대위 소식지에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